

새로운 경제시스템 창출을 위한

# 경제주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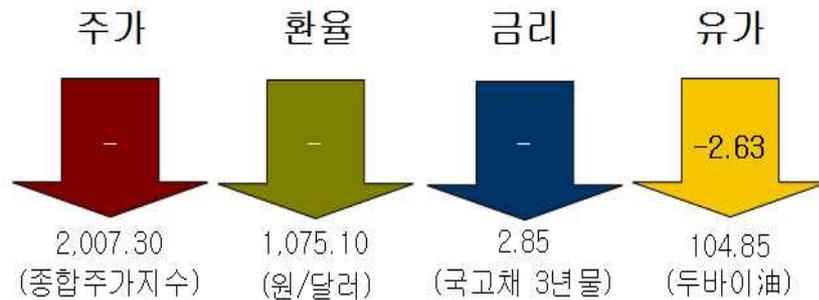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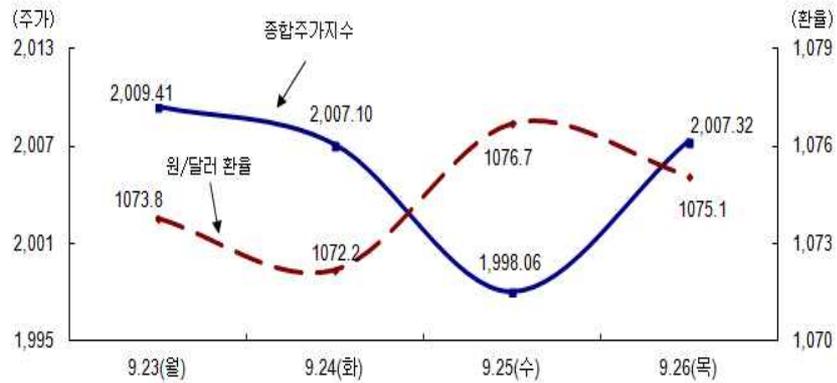
Weekly Economic Review

## □ 최근 규제개혁의 성과와 한계

- 규제의量は 증가하고 質은 하락
- 경제적 규제의 품질 가장 낮아

Better than  
the Best!

週間 主要 經濟 指標 (9.23~9.26)



차 례

|                   |    |
|-------------------|----|
| 주요 경제 현안          | 1  |
| □ 최근 규제개혁의 성과와 한계 | 1  |
| 주요 국내외 경제지표       | 13 |

□ 본 자료는 기업 경영인들을 위해 작성한 국내외 경제 경영 주요 현안에 대한 분석 자료입니다.  
□ 본 보고서의 내용은 연구원의 공식의견이 아닌 연구자의 개인 견해를 밝히며, 보고서 인용 시에는 반드시 출처를 명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 총괄 : 한 상 완 경제연구본부장 (2072-6230, swan@hri.co.kr)

□ 작성 : 김 동 열 기업정책연구실장 (2072-6213, dykim@hri.co.kr)

## Executive Summary

### □ 최근 규제개혁의 성과와 한계 : 규제의 양은 증가하고 質은 하락

#### □ 규제 현황

규제란 특정한 행정 목적을 위해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는 것으로서, 2013년 8월말 현재 15,043건의 규제가 등록되어 있다. 2013년 국가경쟁력 순위는 25위로서 2012년에 비해 6계단 하락했으며 정부규제의 부담은 95위로 후진국 수준에 머물고 있는바, 지난 5년의 규제개혁을 평가해보고 향후 개선 과제를 도출해보고자 한다.

#### □ 최근 규제개혁의 성과와 한계

**(3가지 성과)** 규제개혁의 가장 큰 성과는 6,117건의 누락 규제를 새롭게 발굴하여 등록시켰고, 이를 통해 규제의 실상을 국민들이 보다 명확히 알 수 있게 되었다는 점이다. 둘째, '주된 규제의 비중이 감소했다. 2009년 51.7%에 달했던 '주된 규제'의 비중은 2012년 51.0%로 하락했는데, '주된 규제'의 신설을 까다롭게 함에 따라 '부수적 규제'가 증가하는 **풍선효과**로 해석된다. 셋째, **사회적 규제의 질이 소폭 개선되었다.** 질 높은 '시장유인' 방식이 2008년 7.4%에서 2012년 10.0%로 증가했고, 질 낮은 '투입' 방식 규제는 2008년 87.4%에서 2012년 82.3%로 감소하였다.

**(5가지 한계)** 이와 같은 성과와 규제감축 노력에도 불구하고, 결과적으로는 지난 5년간 **신설된 규제가 폐지된 규제보다, 강화된 규제가 완화된 규제보다 많았다**는 점이 첫 번째 한계라고 지적할 수 있다. 지난 5년간 신설(1,650건)된 규제가 폐지(183건)된 규제보다 1,467건 많았고, 강화(611건)된 규제가 완화(75건)된 규제보다 536건 많았다. 두 번째 한계는 **규제의 강도가 증가하고 있다**는 점이다. 규제의 유형별로 1점에서 4점까지 가중치를 부여하여 분석한 결과 '강한 규제'의 비중이 2009년 이후 증가하고 있으며, 규제강도 지수도 2008년(100) 대비 2012년 139.6로 증가했고, 건당 규제강도도 2009년 2.35점에서 2012년 2.37점으로 소폭 증가했다. 셋째, **경제적 규제의 품질이 가장 낮다.** 경제적 규제 가운데 '강한 규제'의 비중이 계속 증가하며, '건당 규제강도'는 2.51점으로 사회적 규제(2.47점)나 행정적 규제(2.14점)에 비해 높고, '가격' 규제의 건수와 비중도 증가하고 있다. 넷째, **공무원 1천명당 등록규제는 2008년 19.2건에서 2012년 24.2건으로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1천명당 등록규제도 2008년 112.5건에서 2012년 167.7건으로 크게 증가해서, 지방규제의 개혁도 시급한 과제다. 다섯째, **소수 부처의 규제 집중도가 매우 높다.** 복지부, 금융위 등 상위 5개 부처의 규제 비중은 전체의 27.7%에 달한다.

#### □ 시사점

과거와 달리 향후의 규제개혁 노력이 실질적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먼저, **규제총량의 규제가 필요하다.** 기존 규제의 폐지 없이는 새로운 규제의 신설이 거의 불가능하도록 규제총량을 도입하고, 국회도 입법에 따른 규제영향평가를 받도록 하며, 신설 규제는 가급적 존속기한을 설정해야 한다. 둘째, **규제품질의 제고**가 필요하다. 가급적 진입규제보다는 거래규제를, 가격규제보다는 품질규제를 늘리는 등 규제 방식도 선진화해야 한다. 셋째, **규제의 민주화**가 필요하다. 규제의 신설이나 개혁 작업에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가칭) '민관합동 규제개혁 추진단'의 설치가 필요하다. 넷째, **규제개혁의 전국화가 필요하다.** 중앙보다 훨씬 더 많은 지자체 규제의 개혁을 담당하는 지자체별 '지방규제개혁위원회' 등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 <최근 규제개혁의 성과와 한계: 규제의 양은 증가하고 質은 하락>

| 규제 현황 |  |
|-------|--|
| 규제란?  | - 특정한 행정목적의 실현하기 위해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것으로서 법령 등이나 조례·규칙에 규정되는 사항        |
| 규제 유형 | - 경제적 규제, 사회적 규제, 행정적 규제 / 주된 규제, 부수적 규제                                     |
| 규제 현황 | - 규제개혁을 주창했던 지난 5년 동안에도 규제 증가 지속<br>- 2013년 8월말 현재 공포일 기준으로 15,043건의 규제가 등록됨 |

| 최근 규제개혁의 성과와 한계 |  |
|-----------------|--|
| 성과<br>(3가지)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미등록규제 발굴 : 5년간 6,117건의 누락규제를 새로 등록시킴</li> <li>② 주된 규제 비중 감소 : 2009년 주된 규제 51.7.0%, 부수적 규제 48.3% ⇒ 2012년 주된 규제 51.0%, 부수적 규제 49.0%</li> <li>③ 사회적 규제의 품질 소폭 개선 : '시장유인' 방식 규제가 2008년 7.4%에서 2012년 10.0%로 증가</li> </ul>   |
| 한계<br>(5가지)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신설규제와 강화규제 순증 : '신설' 규제가 '폐지' 규제보다 1,467건 많았고, '강화' 규제가 '완화' 규제보다 536건 더 많았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행정적 규제 가장 많이 증가, 경제적 규제도 크게 증가</li> </ul> </li> <li>② 규제 강도 증가 : '강한 규제' 비중 2009년 이후 계속 증가 추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체 규제강도 지수는 2008년 100에서 2012년 139로 증가</li> <li>· 건당 규제강도 지수도 2009년 2.35점에서 2012년 2.37점으로 증가</li> </ul> </li> <li>③ 경제적 규제의 품질 가장 낮아 : 경제적 규제의 강도가 2.51점으로 사회적 규제 2.47점, 행정적 규제 2.14점보다 높고, '가격' 규제의 건수와 비중 모두 증가 추세</li> <li>④ 공무원 1천명당 등록규제 증가 : 2008년 19.2건 ⇒ 2012년 24.2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자체 공무원 1천명당 규제 : 2008년 112.5건 ⇒ 2012년 167.7건</li> </ul> </li> <li>⑤ 높은 규제집중도 : 5개 부처의 규제 비중 27.7%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복지부, 금융위 등 상위 5개 부처의 규제 비중 27.7%에 달해</li> </ul> </li> </ul> |

| 시사점      |   |
|----------|---|
| 규제총량 규제  | - 영국처럼 규제총량을 제한하는 제도 (예: 'One In, One Out') 도입<br>- 규제일몰제 활성화, 규제영향평가(RIA)의 엄격한 적용 등 필요 |
| 규제품질 제고  | - '사후' 규제, '품질' 규제, '거래' 규제 등 질 높은 규제를 장려   |
| 규제 민주화   | - 규제 및 규제개혁의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민주적 시스템 구축   |
| 규제개혁 전국화 | - 중앙부처 규제보다 3.3배 많은 지자체 등록 규제의 개혁도 시급   |

## 1. 규제 현황

- 규제란 '특정한 행정 목적을 위해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것'<sup>1)</sup>으로서, 우리의 규제수준 평가 결과는 후진국과 비슷하며, 국가경쟁력 제고 및 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규제개혁이 매우 중요함
- 규제는 그 성격에 따라 경제적 규제, 사회적 규제, 행정적 규제로 구분하며, 중요도에 따라 주된 규제와 부수적 규제<sup>2)</sup>로 구분함
  - 경제적 규제: 경제, 산업, 금융, 중소기업, 공정거래, 부동산 등과 관련된 규제
  - 사회적 규제: 보건, 의료, 복지, 식품, 안전, 환경, 고용, 교육 등과 관련된 규제
  - 행정적 규제: 행정, 치안, 외교, 인허가, 절차 등과 관련된 규제
- 규제개혁은 총요소생산성 증가<sup>3)</sup>, 경제성장률 및 국가경쟁력 제고로 이어지는 바, 최근 중진국 함정의 우려가 커지고 있는 우리 경제에 있어서 규제개혁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음
  - 세계경제포럼(WEF)의 2013년 국가경쟁력 순위는 25위로서 2012년보다 여섯 계단 하락했으며, 제도적 요인은 74위, 정부 규제의 부담은 95위, 법 체계의 효율성(규제개선 측면)은 101위에 그침

< 규제의 분류 및 건수 >

|           |        | 주된규제  | 부수적규제 | 합계     |
|-----------|--------|-------|-------|--------|
| 경제적<br>규제 | 진입     | 1,137 | 989   | 2,126  |
|           | 가격     | 143   | 113   | 256    |
|           | 거래     | 1,002 | 590   | 1,592  |
|           | 품질     | 591   | 449   | 1,040  |
| 사회적<br>규제 | 사회적 차별 | 428   | 322   | 750    |
|           | 소비자 안전 | 1,182 | 1,058 | 2,240  |
|           | 산업 재해  | 194   | 303   | 497    |
|           | 환경     | 611   | 496   | 1,107  |
| 행정적 규제    |        | 2,359 | 3,078 | 5,437  |
| 전 체       |        | 7,647 | 7,398 | 15,045 |

< 규제의 예시 >

|           | 주된 규제            | 부수적 규제             |
|-----------|------------------|--------------------|
| 경제적<br>규제 | 광업권의<br>설정       | 광업권 설정<br>허가 등의 통지 |
| 사회적<br>규제 | 위해식품 등의<br>판매 금지 | 위해식품 등의<br>폐기 처분   |
| 행정적<br>규제 | 주택조합의<br>설립 인가   | 주택조합원의<br>자격       |

자료: 규제개혁위원회 '규제정보포털'(www.rrc.g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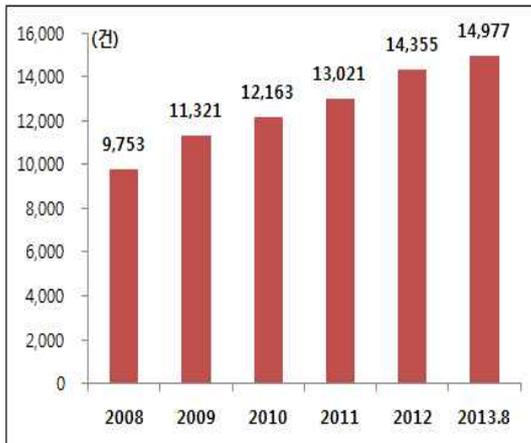
주: 단위는 건수, 공포일 기준, '폐지'/'기타감소' 제외, 2013년9월21일 다운로드

- 1) '행정규제기본법' 제2조의 정의. 최병선(1992)은 규제를 "바람직한 경제사회 질서의 구현을 위해 정부가 시장에 개입하여 기업과 개인의 행위를 제약하는 것"으로 훨씬 더 포괄적으로 정의한 바 있음.
- 2) 부수적 규제란 주된 규제에 따라 오는 규제로서, 주된 규제 관련 절차, 자격, 처벌 규정 등.
- 3) 한국은행(2008)은 "규제가 10% 완화되면 총요소생산성 증가율이 0.3%p 확대된다."고 주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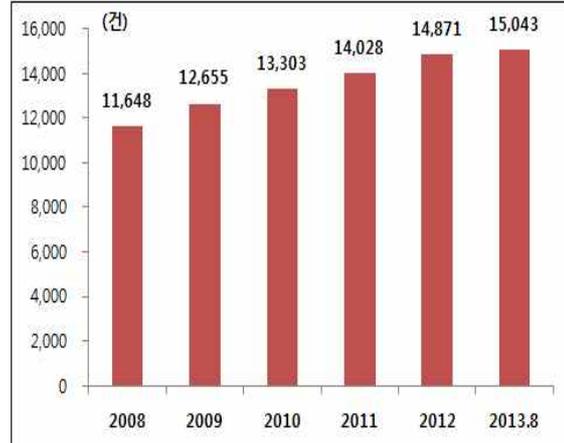
○ (추이) 2009년도에 규제등록 기준의 변동<sup>4)</sup>에 따른 급증을 감안하더라도 등록규제의 증가 추세는 2009년 이후 최근까지 계속되고 있음

- 2013년 8월말 현재 공포일<sup>5)</sup> 기준 15,043건의 규제가 남아 있으며, 2008년 11,648건, 2009년 12,655건으로 등록규제가 급증<sup>6)</sup>했으나 이는 등록 기준이 변경되었고 누락규제를 새롭게 발굴하여 등록하는 등의 특별한 사유가 있었음
- 2008년 MB정부 출범 이후 대대적인 규제개혁 작업에 착수했으며, 누락된 규제를 등록하고, 규제를 주된 규제와 부수적 규제로 분리하여 등록하는 작업을 시작함
- 그러나, "전봇대를 뽑겠다"며 의욕적으로 규제개혁<sup>7)</sup>을 추진했던 MB정부 5년 동안에도 규제의 증가 추세에는 변함이 없었음
- 등록기준 변경으로 2009년에 시행일 기준 규제건수가 급증했음을 감안하더라도, 2010년부터 2012년까지 3년 동안 계속해서 연평균 1천 건 정도씩 규제가 증가함

<연도별 누적 등록규제(시행일 기준)>



<연도별 누적 등록규제(공포일 기준)>



자료: 규제정보포털(www.rrc.go.kr)

주: 1) 폐지/기타감소 제외

2) 2009년에는 규제등록 기준 변경, 누락규제 등록 등으로 급증, 2013년9월21일 다운로드

- 4) 2009년부터 주된 규제와 부수적 규제의 구분이 생겼으며, 그동안 등록하지 않고 있던 미등록규제를 일제히 등록하고 공포함. 이에 따라 공포일 기준으로 2009년도 규제 건수가 급증함 (규제정보포털(www.rrc.go.kr) 참조)
- 5) 공포일은 규제의 가장 최근 변경내용을 등록하고 공포한 날이며, 시행일은 규제를 실제로 시행하기 시작한 날로서, 대개는 공포일이 시행일보다 빠름. 그런데, 예외적으로 누락된 규제(2000년1월 시행)를 새롭게 등록(2013년6월)하면 시행일 기준으로는 2000년, 등록 및 공포일 기준으로는 2013년의 규제에 해당함
- 6) 누락된 규제를 제외하면, 대개는 공포일이 시행일보다 빠른 것이 일반적이므로, 해마다 공포일 기준 규제건수가 시행일 기준 규제건수보다 많음. 2013년 9월 현재 시행일이 2008년으로 되어 있는 규제를 폐지하면, 시행일 기준으로 2012년 말 현재 '폐지' 건수가 증가하고 '잔존' 규제건수는 감소하게 됨. 그러나, '폐지' 기록은 2013년 9월에 등록되므로, 2012년 말의 공포기준 규제건수는 변함없음.
- 7) 한국경제연구원 · 전경련(2007)은 규제개혁을 "규제의 완화·폐지를 포함하여, 규제의 품질을 향상하는 과정"이라고 정의

## 2. 최근8) 규제개혁의 성과와 한계

### (1) 규제개혁의 성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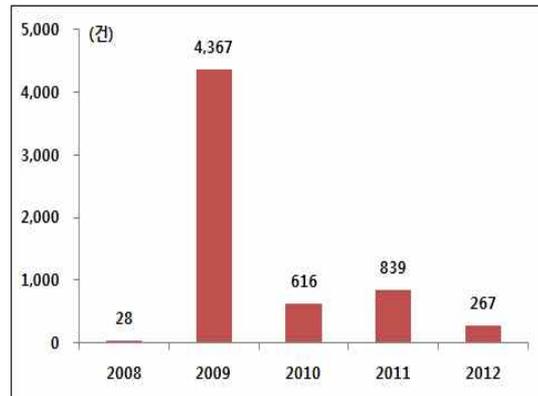
○ (성과1: 미등록규제 발굴) 기존 규제 가운데 누락되어 있던 규제를 6,117건 새롭게 등록시킴으로써, 규제의 실상을 파악하기 쉽게 함

- '누락등록'을 통해 새롭게 발굴된 기존의 미등록 규제는, 유형별로 보면, 행정적 규제 2,804건, 경제적 규제 1,784건, 사회적 규제 1,529건
- 등록단위별로 보면, 주된 규제 2,115건, 부수적 규제 4,002건
- 연도별로 보면, 2009년에 '누락등록'이 4,367건으로, 집중적으로 기존 규제를 발굴

< 유형별 '누락등록' 현황 >

|        | 주된<br>규제 | 부수적<br>규제 | 합계    |
|--------|----------|-----------|-------|
| 경제적 규제 | 616      | 1,168     | 1,784 |
| 사회적 규제 | 547      | 982       | 1,529 |
| 행정적 규제 | 952      | 1,852     | 2,804 |
| 합 계    | 2,115    | 4,002     | 6,117 |

< 연도별 '누락등록' 추이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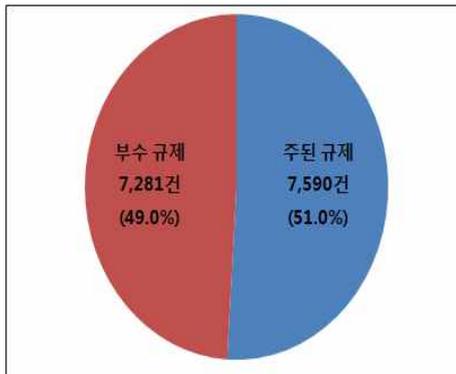
자료 : 규제정보포털(www.rrc.go.kr) 자료 토대로 현대경제연구원 재계산  
 주 : 등록일 기준, 2013년5월30일 데이터 다운로드

○ (성과2: 주된 규제 비중 감소) 2009년<sup>9)</sup>에는 '주된 규제'의 비중이 51.7%에 달했으나, '주된 규제'에 비해 상대적으로 규제등록이 쉬운 '부수 규제'가 더 빨리 늘어남에 따라, 2012년에 '주된 규제'의 비중은 51.0%로 감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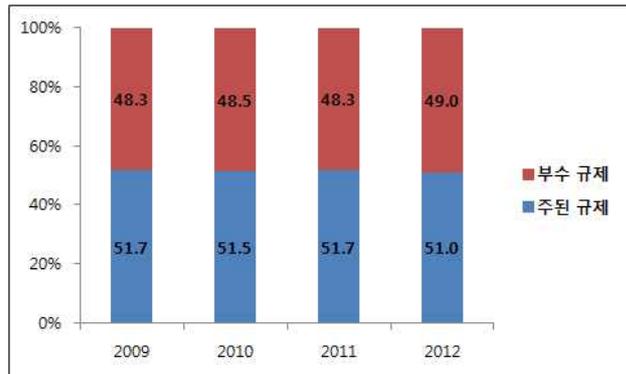
- 2012년 말 현재 등록단위별로 보면, 주된 규제가 7,590건(51.0%), 부수 규제가 7,281건(49.0%) 존재하며, 주된 규제와 부수 규제의 격차가 점차 감소
- 2009년 6,540건이던 주된 규제는 2012년 7,590건으로 1.16배 증가에 그쳤으나, 부수 규제는 2009년 6,115건에서 2012년 7,281건으로 1.19배 증가함

8) 규제정보포털에 규제가 등록되기 시작한 2008년부터 2012년까지(5년)를 기준으로 규제개혁의 성과를 평가함  
 9) 주된 규제와 부수 규제의 구분은 2009년부터 시작되었고, 2008년에는 구분되지 않았으므로, 2009년 이후를 비교 대상으로 삼았음

<등록단위별 규제건수 및 비중>



<등록단위별 규제 비중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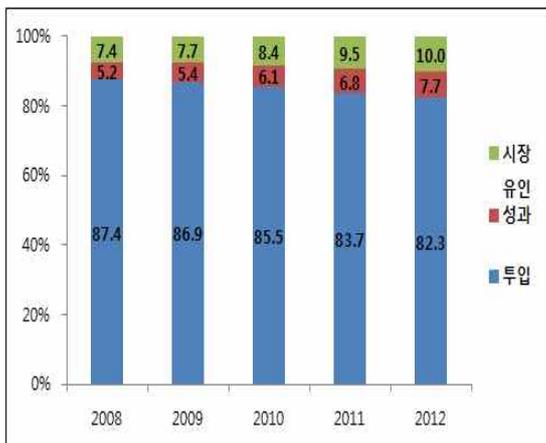
자료: 규제정보포털(www.rrc.go.kr) 자료를 토대로 현대경제연구원 재계산

주: 1) 공포일 기준, 2012년 14,871건 기준, 폐지/기타감소 제외, 2013년9월21일 다운로드  
 2) 2008년은 주된 규제와 부수적 규제로의 구분이 없었던 시기로서, 데이터 없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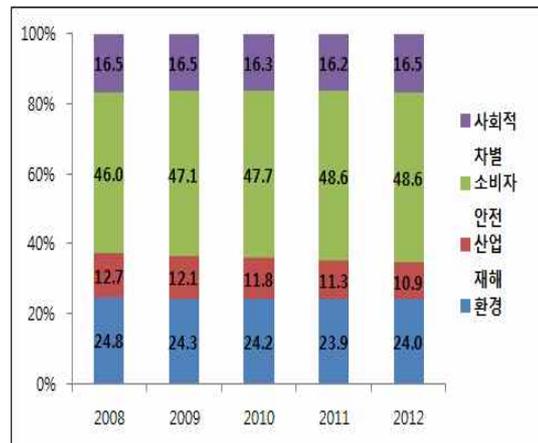
○ (성과3: 사회적 규제의 질 개선) 사회적 규제 중 '시장유인' 방식의 비중이 2008년 7.4%에서 2012년 10.0%로 증가하는 등 사회규제의 질이 개선됨

- 사회적 규제의 방식별 비중을 보면, 질 낮은 규제로 분류되는 '투입' 관련 규제가 2008년의 87.4%에서 2012년 82.3%로 계속해서 감소 추세에 있음
- 반면, 질 높은 규제로 분류되는 '시장유인' 방식과 '성과' 방식의 합은 2008년 12.6%에서 2012년 17.7%로 증가 추세에 있어, 사회적 규제의 질이 개선되고 있음
- 사회적 규제의 분야별 추이를 보면, 소비자 안전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음에 따라서, 소비자 안전 관련 규제의 비중도 증가하고 있음

<사회적 규제의 방식별 추이>



<사회적 규제의 분야별 추이>



자료: 규제정보포털(www.rrc.go.kr) 자료를 토대로 현대경제연구원 재계산

주: 공포일 기준, 2012년 14,871건 기준, 폐지/기타감소 제외, 2013년9월21일 다운로드

## (2) 규제개혁의 한계

- (한계1: 규제 순증) ‘폐지’보다 ‘신설’이 1,467건이나 더 많았고, ‘완화’보다 ‘강화’가 536건이나 더 많아서, 전체적으로 규제 순증이 2,003건으로서 규제개혁은 오히려 후퇴했다<sup>10)</sup>고 할 수 있음
- 공포일 기준으로 2008년부터 2012년까지 최근 5년간 신설(1,650건) 및 강화(611건) 규제는 모두 2,261건으로 폐지(183건) 및 완화(75건) 규제 258건에 비해 2,003건이나 더 많아 ‘규제 순증’이 상당한 규모에 달했음
  - 최근 5년간 행정적 규제의 순증(761건)이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경제적 규제의 순증(683건)이 사회적 규제의 순증(559건)보다 많았음
  - 주된 규제(1,167건 순증)가 부수적 규제(836건 순증)에 비해 많이 늘었는데, 이는 국민들 입장에서 규제의 부담이 더 커지고 있음을 의미함

< 최근 5년간 등록규제의 유형별 순변동 >

|        | 신설·강화(A)     |            |              | 폐지·완화(B)   |            |            | 순증(A-B)      |            |              |
|--------|--------------|------------|--------------|------------|------------|------------|--------------|------------|--------------|
|        | 주된 규제        | 부수적 규제     | 소계           | 주된 규제      | 부수적 규제     | 소계         | 주된 규제        | 부수적 규제     | 전체           |
| 경제적 규제 | 520          | 242        | 762          | 51         | 28         | 79         | 469          | 214        | 683          |
| 사회적 규제 | 343          | 300        | 643          | 41         | 43         | 84         | 302          | 257        | 559          |
| 행정적 규제 | 453          | 403        | 856          | 57         | 38         | 95         | 396          | 365        | 761          |
|        | <b>1,316</b> | <b>945</b> | <b>2,261</b> | <b>149</b> | <b>109</b> | <b>258</b> | <b>1,167</b> | <b>836</b> | <b>2,003</b> |

자료 : 규제정보포털(www.rrc.go.kr) 자료를 토대로 현대경제연구원 재계산  
 주 : 공포일(2008.1.1-2012.12.31) 기준, 2013년9월21일 데이터 다운로드

- 부처별로 보면 2012년 말 현재(5년간), 복지부, 금융위, 공정위, 환경부, 소방방재청, 산림청, 고용노동부 등은 규제의 숫자가 크게 증가
  - 지난 5년간(2008년~2012년, 공포일 기준) 보건복지부 385건, 금융위원회 377건, 공정거래위원회 177건, 환경부 174건, 소방방재청 133건, 산림청 102건, 고용노동부 98건의 규제가 증가함
  - 이어서 방송통신위원회(77건), 여성가족부(72건), 문화체육관광부(60건)의 순으로 규제 증가가 많았음

10) 여러 선행연구를 보면, 규제의 ‘신설’과 ‘강화’를 한 묶음(A)으로 보고, ‘폐지’와 ‘완화’를 한 묶음(B)으로 간주하여 순증(A-B)을 계산하고, 규제개혁의 성과를 평가하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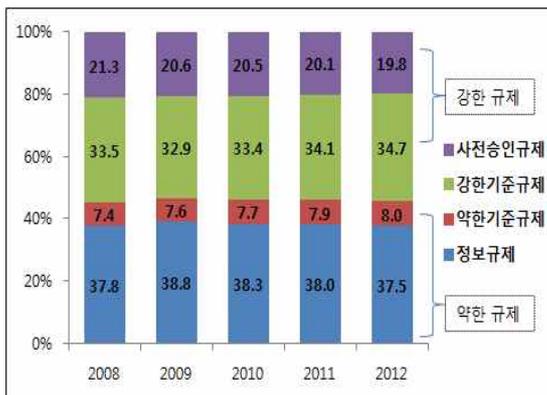
- (한계2: 높은 규제 강도) 규제 유형별 가중치를 부여<sup>11)</sup>해 분석한 결과, 규제 강도가 2009년 이후 소폭 증가하고, '강한 규제'의 비중도 증가함
  - 규제의 강도와 유형에 따라 '사전승인 규제', '강한기준 규제', '약한기준 규제', '정보 규제'로 분류하고 가중치를 각각 4점, 3점, 2점, 1점으로 부여
    - '사전승인 규제'와 '강한기준 규제'를 합한 '강한 규제' 비중은 2008년 54.8%에서 2009년 53.5%로 하락한 이후 계속 증가하여 2012년 54.5%까지 올라옴
  - 2008년을 기준(100)으로 2012년의 '규제강도' 값을 구해보면 139.6으로 4년 전에 비해 규제강도가 1β 이상 증가했으며, 각 년도의 규제건수로 나눈 '건당 규제강도' 값은 2009년 2.35에서 2012년 2.37로 소폭 증가하고 있음
    - 전체 규제강도 지수는 계속 증가하고 있으며, 건당 규제강도 지수는 '약한기준 규제'(2점)와 '강한기준 규제'(3점)의 사이에 위치하며, 최근 소폭 증가함

< 규제강도별 가중치 부여 >

| 분류    | 행정규제기본법상 규제 유형 | 가중치                                    |    |
|-------|----------------|--|----|
| 강한 규제 | 사전승인 규제        | 인가, 허가, 면허, 특허, 승인, 금지 등               | 4점 |
|       | 강한기준 규제        | 시험, 검사, 인정, 확인, 명령, 지정, 증명, 결정, 고용의무 등 | 3점 |
| 약한 규제 | 약한기준 규제        | 지도, 단속, 동의, 행정질서벌 등                    | 2점 |
|       | 정보 규제          | 신고·보고·통지·제출·등록 의무, 추천, 기타 등            | 1점 |

자료 : 현대경제연구원

<규제강도별 비중 추이>



<규제강도를 감안한 규제지수 추이>



자료: 규제정보포털(www.rrc.go.kr) 자료를 토대로 현대경제연구원 재계산

주: 1) 폐지/기타감소 제외, 공포일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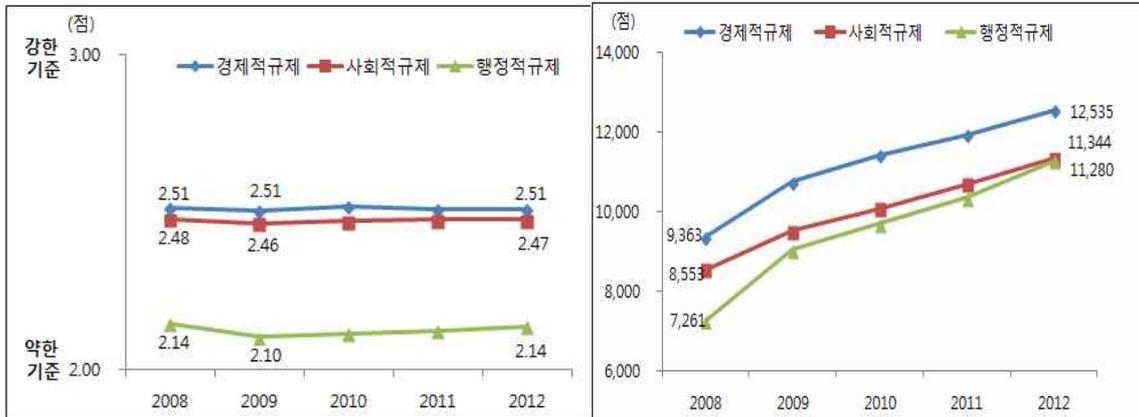
- 2) 전체 규제강도 지수는 가중치를 부여한 후 2008년도 값을 100으로 했을 때 각 년도의 값
- 3) 건당 규제강도 지수는 가중치를 부여한 후 각 연도별 규제건수로 나눈 값

11) 한국은행(2008)에서는 규제 가중치를 사전승인 8점, 강한 기준 4점, 약한 기준 2점, 정보규제 1점으로 부여했으며 이 방식으로 할 경우 건당 규제강도는 본 연구에 비해 더 높아지고 '강한 기준' 규제에 근접함.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가중치를 각각 4점, 3점, 2점, 1점으로 보수적으로 부여했음.

○ (한계3: 경제적 규제의 품질 가장 낮아) 경제적 규제 가운데 '강한 규제'의 비중이 2008년 이후 계속 증가하고, 사회적·행정적 규제에 비해 규제强度가 높고, '가격' 규제 같은 질 낮은 규제도 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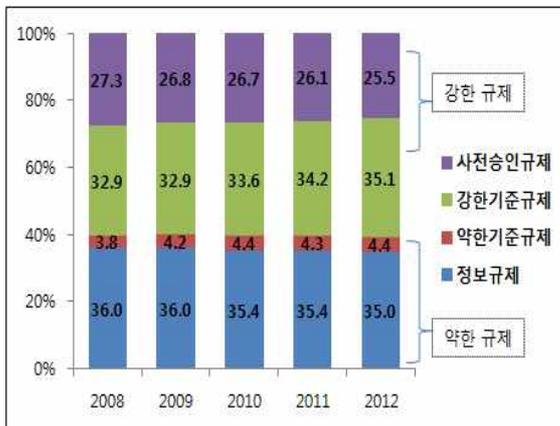
- 경제적 규제의 강도가 2.51점 수준으로 다른 규제에 비해 가장 세며, '강한 규제'의 비중도 2008년 이후 계속 증가하고 있음
- '건당 규제강도'를 비교해 보면, 경제적 규제는 2.51점으로서 사회적 규제(2.47점)나 행정적 규제(2.14점)에 비해 높은 수준에 있음
- 경제적 규제 가운데 '강한 규제'는 2008년 60.2%에서 2012년 60.6%까지 증가했으며, '가격' 규제도 각각 4.7%(188건)에서 5.0%(250건)로 증가함

<경제·사회·행정 규제의 건당 규제강도> <경제·사회·행정 규제의 전체 규제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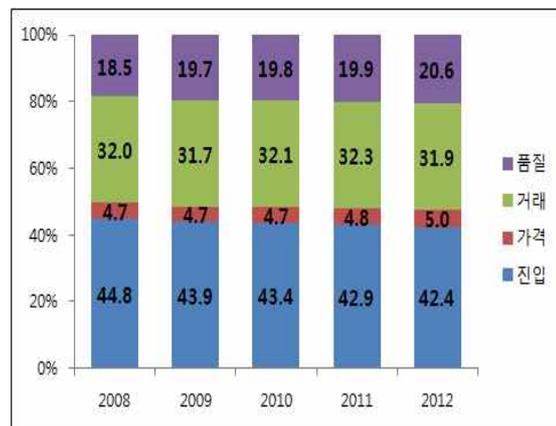


자료: 현대경제연구원 (규개위(www.rrc.go.kr) 자료 토대로 재계산)  
 주: 규제강도 계산은 6쪽 참조, 공포일 기준

<경제적 규제의 규제강도별 비중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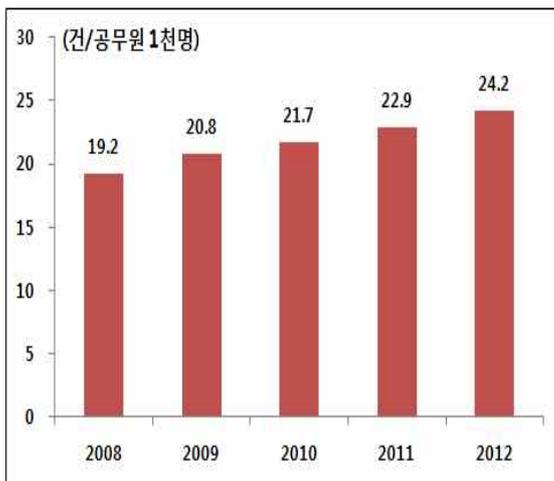
<경제적 규제의 규제성격별 비중 추이>



자료: 현대경제연구원 (규개위(www.rrc.go.kr) 자료 토대로 재계산)  
 주: 규제강도 계산은 6쪽 참조, 공포일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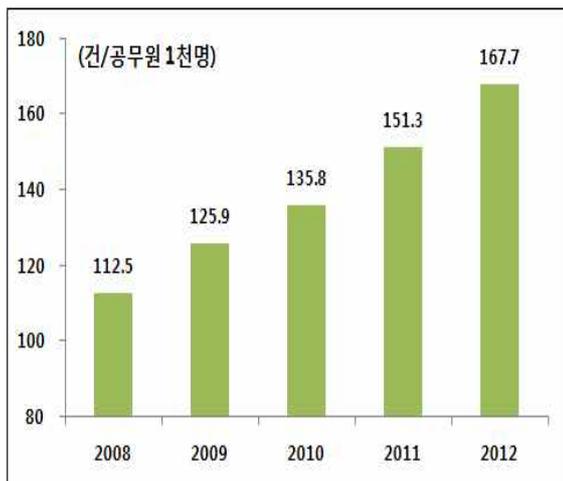
- (한계 4: 공무원 1천명당 등록규제 증가) 행정부 국가공무원 1천명당 등록규제 건수는 2008년 19.2건에서 2012년 24.2건으로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으며, 지방공무원 1천명당 등록규제 건수는 2012년 167.7건에 달함
  - 중앙 행정부처 소속 국가공무원은 2008년 60만7천명에서 2012년 61만5천명으로 완만하게(1.01배) 증가했지만, 규제 건수는 2008년 11,648건에서 2012년 14,871건으로 빠르게(1.28배) 증가함에 따라, 1천명당 규제건수도 크게 증가함
    - 공무원 1천명당 규제건수는 2008년 19.2건에서 2012년 24.2건으로 계속해서 증가<sup>12)</sup>추세에 있음
  - 지방자치단체 등록규제는 중앙부처 등록규제의 3.3배에 달하며, 지방공무원 1천명당 등록규제는 2012년 167.7건으로 중앙부처의 약7배에 달함
    - 2013년 9월 현재 규제정보포털(www.rrc.go.kr)에 등록된 지자체 규제 건수는 49,912건으로 중앙부처 규제(8월말 현재 15,043건)의 3.3배나 많은 숫자임
    - 지방공무원 1천명당 등록규제는 2008년 112.5건에서 2012년 167.7건으로 크게 증가하고 있으며, 중앙부처의 1천명당 등록규제 24.2건보다 약7배 많음
    - 중앙부처 등록규제의 심사와 개혁을 전담하는 조직과 체계가 정비되어 있지만, 아직 지자체에는 이와 같은 규제개혁 시스템이 미비함

<공무원 천명당 등록규제 추이>



자료: 현대경제연구원  
 주: 1) 중앙부처 행정부 공무원 기준  
 2) 규제는 공포일 기준

<지자체 공무원 천명당 등록규제 추이 >



자료: 현대경제연구원  
 주: 지방자치단체 소속 지방공무원, 현원 기준

12) 중앙부처 등록규제만 분석하고 있으므로 공무원도 중앙 행정부처 소속 국가공무원만 포함시켰으며, 입법부, 사법부, 지자체의 공무원은 제외함. 지방자치단체 관할 등록규제는 2013년 9월 21일 현재 49,912건에 달함

○ (한계 5: 높은 규제집중도) 부처별로 등록규제의 집중도를 보면, 5개 부처가 30% 가까운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

- 2012년 기준으로 보건복지부, 금융위원회, 환경부, 고용노동부, 소방방재청 등 5개 부처가 전체 규제의 27.7%를 차지하고 있으며, 5개 부처의 규제집중도는 2008년(27.6%)과 비슷한 수준임

· 노동 및 금융 관련 규제가 많다는 점이 노동 및 금융 관련 국제경쟁력 순위가 매우 낮다는 점과 연결되어 있는지에 관한 추가 분석이 필요함

· CR5<sup>13)</sup> : 27.6('08) ⇒ 28.1('09) ⇒ 27.9('10) ⇒ 27.8('11) ⇒ 27.7('12)

· CR3 : 19.4('08) ⇒ 20.3('09) ⇒ 20.3('10) ⇒ 20.3('11) ⇒ 20.4('12)

### 3. 시사점

○ 정부 규모의 증가 경향을 간파한 '파킨슨의 법칙'<sup>14)</sup>처럼 규제 역시 공무원의 권력 및 낙하산 인사와 연계되어 있으므로, 계속해서 증가하려는 경향을 지니고 있음

- MB정부에서 “전봇대를 뽑아내겠다.”며 의욕적으로 규제개혁 노력을 기울였으며, ‘비즈니스 프렌들리’ 정부로서의 이미지를 심기 위해 노력했지만, 결과적으로 보면 등록규제는 계속해서 순증하고 있음

· 우리나라에서 규제일몰제가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있음. 즉, 2012년8월까지 3년8개월동안 신설된 954건의 규제 중에서 존속기한을 설정한 경우는 12건(1.3%)에 불과<sup>15)</sup>함

13) CR5는 상위 5개 부처의 규제가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 CR3은 상위 3개 부처의 규제가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나타냄

14) 영국 행정학자 파킨슨(Cyril N. Parkinson)이 주창한 법칙으로, ‘공무원의 수는 해야 할 업무의 경중이나 그 유무에 관계없이 일정 비율로 증가한다.’는 것이다. 파킨슨은 공무원 수 증가를 부하배증의 법칙(제1공리)과 업무배증의 법칙(제2공리) 두 가지로 설명했다. 부하배증의 법칙은 특정 공무원이 과중한 업무에 허덕이게 될 때 그는 동료보다는 그를 보조해 줄 부하를 보충받기를 원한다는 것이며, 업무배증의 법칙은 부하가 배증되면 과거 혼자서 일하던 때와는 달리 지시, 보고, 승인, 감독 등의 파생적 업무가 창조되어 본질적 업무의 증가 없이 업무량의 배증 현상이 나타난다는 것이다. (이종수, 『행정학사전』, 대영문화사, 2009)

15) 김종훈의원실 보도자료, ‘위축된 경기회복 해법은 ‘규제완화’, 2012년 10월 5일

- 따라서, 규제 총량을 제한하기 위한 시스템을 도입하고, 기업 등 규제를 당하는 이해관계자들이 규제 신설이나 규제 개혁 프로세스에 참여하도록 하며, 규제일몰제와 규제영향평가 등 규제개혁을 위한 제도의 활성화가 필요함

① (규제총량 규제) 규제의 총량한도를 규제하는 시스템(예: One In, One Out)의 도입을 통해 규제 건수를 적절히 관리할 필요가 있음

- 규제 건수를 공무원 수에 연계하여 관리하거나, 신설 규제에 규제일몰제 적용을 보편화하며, 국회의 의원입법에도 규제영향평가(Regulatory Impact Assessment)를 철저하게 적용하는 등의 조치를 통해 규제 총량을 관리함
  - 특히, 법 통과 절차와 기간이 짧은 의원입법<sup>16)</sup>의 경우에도 규제영향분석(RIA)을 꼭 거치도록 의무화하는 등 규제 증가를 규율하는 통제 장치 필요
  - 중앙부처 공무원 1인당 규제 건수는 19.2건(2008년)에서 24.2건(2012년)으로 계속 증가하고 있으므로, 이를 참고로 하여 규제총량의 상한선 설정을 검토
- 영국은 2008년 금융위기 이후 경기회복을 위한 주요 정책과제로서 규제개혁을 천명했고, 2010년 5월 ‘기존 규제 폐지 없이 새로운 규제 신설 없다’(One In, One Out)는 정책과 ‘규제 일몰제’(Sunset Clauses)를 도입한 바 있음

② (규제품질 제고) 진입을 막거나 가격을 직접 규제하는 방식의 낮은 규제보다는 거래와 품질을 규제하는 방식으로 전환하여, 규제의 품질을 높이는 ‘선진시스템’ 구축

- 규제의 품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직접적 규제보다는 간접적 규제를, 사전적 규제보다는 사후적 규제를 장려하는 ‘선진화된 규제시스템’ 도입이 필요
  - 향후에는 규제 건수와 함께 규제 방식에 대해서도 보다 신중한 검토가 필요

16) 지난 18대 국회에서 가결된 규제 신설·강화 법률안 266건 중 219건(82.3%)이 의원발의에 의한 것이라는 조사결과 참조(2011.9월 전경련 규제개혁 시리즈 11-0, 2008.4월~2011.8월 입법내용 분석 결과)

- ③ (규제 민주화) 정부 중심의 규제 및 규제개혁에서 벗어나, 규제 및 규제 개혁의 수혜자들과 이해관계자들이 함께 참여하는 규제 및 규제개혁의 민주화가 필요
- 국가경쟁력위원회와 대한상공회의소가 공동으로 추진했던 ‘민관합동 규제개혁 추진단’을 참고하여, 전문가와 기업인들이 행정부의 규제개혁에 함께 참여하는 시스템을 구축
  - 규제의 신설뿐만 아니라 규제의 개혁 과정에도 이해관계자들이 함께 참여하는 ‘규제의 민주화’를 검토할 필요가 있음
- ④ (규제개혁의 전국화) 중앙부처 등록규제의 개혁도 시급하지만, 중앙보다 3.3배 더 많은 지방자치단체 등록규제도 규제개혁의 관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으며, ‘광역시도 규제개혁위원회’를 운영할 필요가 있음
- 총리실의 규제개혁위원회와 마찬가지로 각 광역자치단체에도 단체장 직속으로 ‘광역시도 규제개혁위원회’를 신설하고, 5만여개에 달하는 지자체 등록규제의 품질을 제고하고 규제를 완화하는 작업이 필요함

경제연구본부 기업정책연구실장 김동열 (02-2072-6213)

<참고 자료 및 문헌>

- 규제개혁위원회 '규제정보포털'(www.rrc.go.kr)
- 규제개혁위원회, 『규제개혁백서』, 2007년, 2011년, 2013년
-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 '행정규제기본법' 및 '시행령'
- 김종훈의원실 보도자료, "위축된 경기회복 해법은 '규제완화'", 2012년10월5일
- 이종한, "등록규제DB를 이용한 이명박 정부 규제개혁의 평가", 2012 규제개혁 백서, 2013년2월
- 전국경제인연합회 보도자료, "규제 내용부터 관리시스템까지 전면 재검토해야", 2013년 6월 7일
- 최병선, 『정부규제론』, 1992
- 한국경제연구원 · 전국경제인연합회, 『규제개혁 종합연구』 제1권 '총론 및 요약', 2007.10
- 한상우, "역대 정부의 규제개혁 추진과 향후 입법적 과제", 법제처, 2012.6.1
- 한국은행, "규제완화가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 - 총요소생산성 증대 효과를 중심으로 -", 한국은행 '월간경제동향', 2008년 9월호, 2008

주요 국내외 경제지표

□ 주요국 성장률 추이

| 구분    | 2011년 | 2012년 |      |      |      |      | 2013년 |      |     |
|-------|-------|-------|------|------|------|------|-------|------|-----|
|       |       | 연간    | 1/4  | 2/4  | 3/4  | 4/4  | 연간(E) | 1/4  | 2/4 |
| 미국    | 1.8   | 2.8   | 3.7  | 1.2  | 2.8  | 0.1  | 1.7   | 1.1  | 2.5 |
| 유로 지역 | 1.4   | -0.6  | -0.1 | -0.2 | -0.1 | -0.6 | -0.6  | -0.3 | 0.3 |
| 일본    | -0.6  | 1.9   | 4.8  | -0.9 | -3.6 | 1.0  | 2.0   | 4.1  | 3.8 |
| 중국    | 9.3   | 7.8   | 8.1  | 7.6  | 7.4  | 7.9  | 7.8   | 7.7  | 7.5 |

주 1) 2013년 연간 전망치는 IMF 2013년 7월 기준이고, 한국은 현대경제연구원 전망치임  
 2) 미국, 일본은 전기대비 연율, EU는 전기대비, 중국은 전년동기대비 기준임.

□ 국제 금융 지표

| 구분 | 2011년말           | 2012년   |         | 2013년   |        |         |           |
|----|------------------|---------|---------|---------|--------|---------|-----------|
|    |                  | 6월말     | 12월말    | 9월 20일  | 9월 26일 | 전주비     |           |
| 해외 |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 | 1.88    | 1.65    | 1.70    | 2.74   | 2.65    | -0.09%p   |
|    | 엔/달러             | 77.66   | 79.37   | 85.86   | 99.36  | 98.51   | -0.85¥    |
|    | 달러/유로            | 1.2955  | 1.2437  | 1.3222  | 1.3524 | 1.3521  | -0.0003\$ |
|    | 다우존스지수(p)        | 12,218  | 12,880  | 12,938  | 15,451 | 15,328  | -123p     |
|    | 닛케이지수(p)         | 8,455   | 9,007   | 10,395  | 14,742 | 14,799  | 57p       |
| 국내 | 국고채 3년물 금리(%)    | 3.34    | 3.30    | 2.82    | -      | 2.85    | -         |
|    | 원/달러(원)          | 1,151.8 | 1,145.4 | 1,070.6 | -      | 1,075.1 | -         |
|    | 코스피지수(p)         | 1,825.7 | 1,854.0 | 1,997.1 | -      | 2,007.3 | -         |

□ 해외 원자재 가격 지표

| 구분      | 2011년말 | 2012년  |        | 2013년  |        |        |         |
|---------|--------|--------|--------|--------|--------|--------|---------|
|         |        | 6월말    | 12월말   | 9월 20일 | 9월 26일 | 전주비    |         |
| 국제 유가   | WTI    | 99.22  | 84.86  | 90.89  | 104.72 | 102.99 | -1.73\$ |
|         | Dubai  | 104.89 | 92.89  | 107.99 | 107.48 | 104.85 | -2.63\$ |
| CRB선물지수 | 305.30 | 284.19 | 294.78 | 287.44 | 286.77 | -0.67p |         |

1) CRB지수는 CRB(Commodity Research Bureau)사가 곡물, 원유, 산업용원자재, 귀금속 등의 주요 21개 주요 상품선물 가격에 동일한 가중치를 적용하여 산출하는 지수로 원자재 가격의 국제기준으로 간주됨.

□ 국내 주요 경제지표 추이

| 구 분             |                | 2011     |       |       | 2012  |       |       | 2013(E) |
|-----------------|----------------|----------|-------|-------|-------|-------|-------|---------|
|                 |                | 상반기      | 하반기   | 연간    | 상반기   | 하반기   | 연간    |         |
| 국민계정            | 경제성장률 (%)      | 3.9      | 3.5   | 3.7   | 2.6   | 1.5   | 2.0   | 2.6     |
|                 | 민간소비 (%)       | 3.1      | 1.7   | 2.4   | 1.2   | 2.2   | 1.7   | 2.1     |
|                 | 건설투자 (%)       | -7.0     | -2.6  | -4.7  | -1.9  | -2.4  | -2.2  | 2.5     |
|                 | 설비투자 (%)       | 9.0      | -1.3  | 3.6   | 2.3   | -6.1  | -1.9  | 1.0     |
| 대외거래            | 경상수지<br>(억 달러) | 81       | 184   | 265   | 137   | 294   | 431   | 395     |
|                 | 무역수지<br>(억 달러) | 153      | 155   | 308   | 109   | 174   | 283   | 270     |
|                 | 수출<br>(억 달러)   | 2,736    | 2,816 | 5,552 | 2,750 | 2,729 | 5,479 | 5,589   |
|                 |                | (증가율, %) | 23.6  | 14.9  | 19.0  | 0.5   | -3.1  | -1.3    |
|                 | 수입<br>(억 달러)   | 2,582    | 2,662 | 5,244 | 2,641 | 2,555 | 5,196 | 5,319   |
|                 |                | (증가율, %) | 26.7  | 20.2  | 23.3  | 2.3   | -4.0  | -0.9    |
| 소비자물가 (평균, %)   |                | 3.9      | 4.1   | 4.0   | 2.7   | 1.6   | 2.2   | 1.6     |
| 실업률 (평균, %)     |                | 3.8      | 3.0   | 3.4   | 3.5   | 2.9   | 3.2   | 3.3     |
| 원/달러 환율 (평균, 원) |                | 1,102    | 1,114 | 1,108 | 1,142 | 1,112 | 1,127 | 1,105   |

주 : E(Expectation)는 전망치